

日帝植民統治下の 社會變動¹⁾

金 雲 泰*

< 目 次 >

I. 社會階層分化	IV. 勞動階層의 成長과 分化
II. 人口變動	V. 韓國經濟의 變動面
III. 都市化 過程	VI. 結 語

<요 약>

여기서 우리는 일제가 한국에 침입하여 그 40년간의 식민지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사회구조가 변혁되어 식민지배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배기반을 구축하였는가를 민족별 인구변동과 도시화 과정 및 사회계층분화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社會階層分化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한국정부의 양전과 토지제도를 부정하고 강행된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에 끝이 났으며 여기서 구래의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개편하여 토지소유제를 이룩하고 지세부과의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토지의 매매양도가 자유롭게 되었고 또한 농촌 속으로 침투된 화폐경제 및 조세, 전매제도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分解 및 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한국농민의 계층적인 구성의 변천을 보면 1913~17년(평균)간에 자작 55만5천호(21.7%), 자·소작 99만 1천호(38.8%), 소작농 1백만8천호(39.5%)로 이는 1918~22년(평균)간의 각각 자작 52만9천호(20.0%), 자·소작 1백1만5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의학술원회원

1) 본 논문은 筆者의 최근저작 改訂版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1988年 3月 初版 刊行)에서 전재한 것임.

(38.4%), 소작농 1백9만8천호(41.6%)로 기울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총독부 말기로 다가오면서 자작 53만9천호(19.0%), 자·소작 71만9천호(25.3%)로 자작의 점진적 감소에 비해 자·소작의 격감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소작농은 1백58만3천호(55.7%)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따르는 한민족의 궁핍화를 실증하는 것이며 농업경영구조와 그 수취관계에서 결과된 제요소는 총독부에 의하여 보존 실시되었으며 외형상 근대적 소유관계, 경영상의 근대적 양상을 띠고 있는 데 불과하였다.²⁾

그리고 1918년 이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농업 외에 취업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농민분해 및 분화는 농촌 속에 상대적 과잉인구를 잠재케 함으로써 農耕의 영세성과 반봉건적 소작관계를 확대하였고 또한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을 희생시켰다. 이것은 한쪽으로는 대지주층으로 토지의 집중을 가져오고 다른 한쪽으로는 반농노적인 빈농층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토지조사사업으로 일본은 소작제도에 기생하는 매판적 지주세력을 식민지 통치를 위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제식민정책하에서 이러한 추세는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수행으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중점을 두는 식민지 산미정책으로 전환하자 한국농업의 식민지적 미곡단종경작구조로서 재편성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産米開發」이란 미명하에 移植資本主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임야조사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산림을 약탈하고 일본공업원료로서 棉花·繭을 획득하기 위하여 면화재배와 産繭 증수 및 양잠업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산미정책, 산림정책 및 산면화전 증수정책은 일본인 地主의 증대를 가져온 반면에 한국농민의 빈궁화를 가속화하였던 것이다.

이 산미증식사업으로 일본의 식량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한국농민에게는 「쌀을 팔고 조를 사들이는 농민경제」가 되었다. 1926~33년의 한국미 수출과 조(粟)와 外米 수입상황을 보면 일본으로 빼앗긴 6백75만1천석의 쌀에 대하여 1백95만4천석의 外米(24만8천석)와 조(1백70만6천석)로써는 한국농민이 기아에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고율소작료와 한국에 있어 주식곡물의 소비의 격감³⁾ 등으로

2) 洪以變, “日帝植民地時代の 歴史的 性格,” 「韓國近代史論」 I, 知識産業社, p.12; 李在茂, “韓國に於ける土地調査事業の實態,” 「社會科學研究」 7卷 5號, 1955.

3) 미곡 소비량의 감소추세(연평균)

인하여 당시의 식민지 한국의 궁핍한 실정을 일본인 학자들도 「근대적 불행」이나 또 「조선농민의 궁핍화는 심각하다고 하기보다는 처참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⁴⁾ 이 궁핍에서 결과된 이농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리고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산업정책으로 더욱 촉진된 농민의 궁핍으로 인하여 火田民과 移民人口도 매년 증가하였다. 1927년에는 화전민의 수가 1916년의 2.8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⁵⁾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새로운 농토를 찾아 만주로 떠난 이민수가 1927년의 56만에서 1936년에는 무려 87

<표 1> 한국농민의 이농 후 상황(1925년)

(단위: 名, %)

	상업	공업잡업	노동· 傭人	日本渡航	만주· 시베리아	一家離散	기타잡업	계
인구수	23,728	16,8779	69,644	25,308	4,224	6,834	3,497	150,114
비율	15.81	11.24	46.39	16.86	2.81	4.55	2.33	100.0

자료: 洪以燮, “日帝植民時代の 歴史的 性格,” 전개서, p.14.

구 분 연 도	한국내소비량	인구총수 (4월 말 현재)	1인당 연소비량 (A)	A의 지수
1914~19	11,777,210석	16,675,835인	0.7070석	100
1920~24	11,185,987	17,581,922	0.6362	90
1925~29	9,726,557	18,987,184	0.5123	72
1930~33	9,072,556	20,234,303	0.4484	63

일제의 막대한 미곡수탈로 한국농민을 缺食狀態로 몰아 넣은 한 실례로서 위의 표를 보면 産米増殖計劃 실시 이전에는 약 1,200만석의 미곡이 매년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었는데 산미증식계획으로 미곡생산량이 현저하게 증가된 1930~33년 4년 평균에 있어서는 약 900만석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1인당 年消費量으로 볼 때는 0.7070석에서 0.4484석으로 무려 37%나 감소하고 있다. 즉 3분의 2로 격감한 셈이다(朝鮮總督府, 「朝鮮米穀要覽」; 東畑精一·大川一司, 「朝鮮米穀經濟論」, p.86 참조).

4)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朝鮮農業經濟序論」, pp.32-33; 洪以燮, 전개서, p.14.

5) 「數字朝鮮研究」第1輯 第4節, “農民的 離散狀態,” pp.51-52.

1916년 火田民口 49,161戶 同人數 245,626人

1927년 火田民口 134,818戶 同人數 697,888人

만으로 증가하였으며 제 2 차 대전 말기에는 약 100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1910년에는 250명에 지나지 않던 일본에의 이민수가 1913년에는 3천명, 1920년에는 4만7백55명, 1930년에는 41만9천명, 1940년에는 100만여명으로 증가하였다.⁶⁾

특히 1920년대가 되면서 일제는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얻은 과잉자본을 한국에 투자한 결과 근로자계급의 양적 증대를 초래하였다. 광공업의 발달에 따라 1921년 1만 정도밖에 되지 않던 근로자가 1931년에는 14만, 1937년에는 27만, 1943년에는 73만으로까지 격증하였다. 이는 광공업 노동자의 합계이지만 그 이외의 각종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까지를 포함한다면 노동자가 전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노동자의 생활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빈곤하기가 그지 없었다.

일제의 식량약탈을 목표로 한 식민지 농업정책과 그에 수반하는 한국농민의 각종의 과중한 부담은 한국농민을 급격히 몰락시키어 소작농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표 2〉의 통계에 의하면 1942년에는 소작에 관련된 농민이 소작농 53.8% (1,641,702호)와 자소작농 23.9% (729,431호)를 합계하여 전 농민의 77.7% (2,371,133호)에 달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농민은 자작농으로부터 소작농으로 전락해 가는 추세에 있었으며 1942년의 소작농이 전 농가의 53.8%나 점하고 있어 1929년에 비해서 8.2% (35만8천여호)나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5만7천호 (1.8%)가 純火田民으로 동 기간에 2만6천호 이상이나 증가하고 또 농업 노동자(피용자)가 약 10만호(약 3% 이상)에 달하여 이상 약 60%가 토지 없는 빈농이었다. 또한 일제의 제 2 차 산미증식계획이 폐기된 1934년에는 토지를 잃고 농업노동자로 전락된 농민이 총농가의 3.4%에 달하고 있으며 火田民이 2.7%에 달하게 되었다(〈표 2〉 참조).

이들 토지를 상실한 한국농민은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서 농촌에 남아 있지 못하고 離農向都 및 해외이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농민의 일부는 한국 내의 도시로 나가 유민이 되거나 광산 및 공업지대로 들어가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농민은 국내에서 일터를 찾지 못하고 남부여대하여 만주와 일본으로 이민을 떠났다. 혹은 국내, 일본, 만주, 중국, 남방동지의 전선에 군무원으로 강제이동 동원되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으로 도향한 한국농민의 수는 약 100만명에 달하였고 만주로의 流民은 약 150만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치

6) A.J. Grajdanzev, *Modern Korea*, pp.81-83.

〈표 2〉 일제하 농민의 계층별 이동

(단위: %)

연도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농업노동자	화전민
1913	3.1	22.8	32.4	41.7		
1914	1.8	22.0	35.1	14.1		
1915	1.5	21.7	40.8	36.0		
1916	2.5	20.1	40.6	36.8		
1917	2.8	19.6	40.2	37.4		
1918	3.1	19.7	39.2	37.6		
1919	3.4	19.7	39.2	37.6		
1920	3.3	19.5	37.4	39.8		
1921	3.6	19.6	36.6	40.2		
1922	3.7	19.7	35.8	40.8		
1923	3.7	19.5	35.2	41.6		
1924	3.8	19.4	34.6	42.2		
1925	3.8	19.9	33.2	43.2		
1926	3.8	19.1	32.5	43.3		1.3
1927	3.8	18.7	32.7	43.8		1.0
1928	3.7	18.3	32.0	44.9		1.2
1929	3.7	18.0	31.5	45.6		1.2
1930	3.6	17.6	31.0	46.5		1.3
1931	3.6	17.0	29.6	47.4		1.4
1932	3.6	16.3	25.3	52.8	2.9	2.0
1932		18.4	24.9	51.8	2.9	2.0
1933		18.1	24.1	51.9	3.1	2.8
1934		18.0	24.0	51.9	3.4	2.7
1935		17.9	24.0	51.9	3.6	2.5
1936		17.9	24.1	51.8	3.8	2.4
1937		18.0	25.1	51.7	3.8	2.4
1938		18.1	23.9	51.9	3.8	2.3
1939		17.9	23.7	52.4	3.7	2.3
1940		18.0	23.3	53.0	3.3	2.2
1941		17.9	23.5	53.7	3.0	1.9
1942		17.4	23.9	53.8	3.1	1.8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각 연도에서 작성.

하의 한국농민은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의하여 가혹한 수탈과 학대를 당하여 더욱더 몰락하는 추세에 있다가 8.15해방을 맞은 것이었다.

Ⅱ. 人口變動

1907년 5월 한국정부 호구조사에 의하면 호수가 2,333,087호이고 인구는 9,781,671명이었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1906년 말 현재 호구는 2,355,796호이고 인구는 9,867,715명이다.

한편 1906년 10월 호구조사를 관리한 한국정부 경무고문 마루야마 시게도시(丸山重俊)에 의하면 동년 한국정부 내부에서 조사한 호구와의 차이(호수에서 937,946호 증가, 인구에서 3,845,002명 증가)가 많은 것은 과거 한국의 호구조사가 누락되고 불완전한 호수대장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사실상 1925년부터 매 5년마다 일제가 실시한 國勢調查結果(5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호구자료의 신빙성이 대단히 미약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다음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증된다.

병합 당시의 호구는 2,804,103호이고 인구는 13,313,017명이던 것이 1940년에는 호구가 4,299,967호이고 인구는 24,326,327명으로 30년간에 호구가 1.5배, 인구는 1.8배로 증가되었다. 또한 1925년에 인구가 19,522,925명이었는데 1944년에는 인구가 25,120,180명으로 증가하여 20년간에 1.3배(560만)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증가는 일제시대에 와서 점차로 내려가기 시작한 사망률과 높은 출생률이 계속된 데에 연유한다.⁸⁾

민족별 인구구성을 보면 1940년에 전체인구 중에 한국인이 96.80%이고 일본인이 2.91%이며 나머지(0.2%)는 주로 중국인이다. 일본인은 1910년 병합 당시에 이미 50,992세대에 171,543명이 거주하였는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1940년에는 707,337명이 되었다. 그러나 기타 外國人은 1910년에 비하여 비록 증가는 하였지

7) 金泳謨, "일제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日帝下の 民族生活史』, 民衆書館, 1971, p.497 수록.

8) 張潤植, "인구의 변동," 『新社會 100年』, 韓國現代史 第8卷, 新丘文化社, 1971, pp.233-37. 1925~42년간에 人口 1,000명당 연평균 사망률은 1925~29년이 28.9, 1930~34년이 27.0, 1938~42년이 22.6이다. 1925년 이후 약 15년간에 사망률이 20% 이상 감소되고 있다. 사망률 감소의 원인으로 ① 생산증진이나 교통수단개량에 따르는 식량보급의 원활화, ② 공중보건시설의 확장과 現代醫術의 도입, ③ 약품제조판매의 총독부 관리와 藥劑師, 제약판매상 면허제 실시 등을 들고 있다.

〈표 3〉 일제시 민족별 인구비 변동

연도	성별	민족			합계(실수) (%)
		한국인 (%)	일본인 (%)	외국인 (%)	
1910	남	98.52	1.30	0.15	99.97(7,057,458)
	여	98.72	1.13	—	99.85(6,255,359)
	합계	98.46	1.28	0.09	99.83(13,313,017)
1915	남	97.86	1.94	0.18	99.98(8,370,940)
	여	98.20	1.76	—	99.96(7,907,449)
	합계	97.87	1.86	0.10	99.83(16,208,389)
1920	남	97.67	2.07	0.24	99.88(8,910,117)
	여	98.03	1.93	—	99.96(8,379,866)
	합계	97.77	1.97	0.14	99.88(17,289,983)
1925	남	97.05	2.42	0.53	100.00(10,020,943)
	여	97.81	2.12	0.07	100.00(9,502,002)
	합계	97.42	2.27	0.31	100.00(19,522,945)
1930	남	96.60	2.66	0.74	100.00(10,763,679)
	여	97.52	2.34	0.14	100.00(10,294,626)
	합계	97.05	2.50	0.45	100.00(21,058,305)
1935	남	96.60	2.90	0.50	100.00(11,662,657)
	여	97.30	2.50	0.20	100.00(11,236,381)
	합계	97.00	2.70	0.30	100.00(22,899,038)
1940	남	96.52	3.05	0.43	100.00(12,266,230)
	여	97.08	2.76	0.16	100.00(12,060,097)
	합계	96.80	2.91	0.29	100.00(24,326,327)

자료: 1) 1910, 1915, 1920년의 통계는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의거.

2) 1925, 1930, 1935, 1940년의 통계는 「朝鮮國勢調查報告」에 의거.

비고: 1942년의 한국의 인구는 한국인 25,525,409명, 일본인 752,823명, 외국인 83,169명
합계 26,361,401명이었고(近藤劬一, 「太平洋戰下の朝鮮及報臺灣」, 朝鮮近代史料
(I), 1944, p.2), 1944년에는 한국인 25,133,352명, 일본인 712,583명, 외국인 71,573명
합계 25,917,881명 이었다(近藤劬一, 「太平洋戰下朝鮮の治政」, 朝鮮近代史料(2), 第
85回 帝國議會 說明資料, p.200).

만 1930년경을 고비로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 한국인은 1910년에 2,749,956세
대에 13,128,780명이, 1940년에는 4,128,721세대에 23,547,465명으로 증가되었
다. 즉 30년간에 인구증가율이 약 80%(연평균 증가율 2.0%)에 달하고 있는 것

이다. 또 1943년 말에는 4,679,899세대에 25,827,308명으로 증가하여 병합 후 34년간에 약 2배의 증가를 보았다.

성별 인구구성은 한국인은 여자의 구성비율이 높고 일본인, 외국인인 남자의 구성비율이 높다. 1910년에 한국인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0.2% 많던 것이 1940년에는 여자가 0.56% 더 많아졌으며 일본인은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0.17% 많던 것이 1940년에는 0.29%나 더 많아졌다. 이것은 외지에 대한 이민정책이 침병으로서 남자가 더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全家移民보다 개별이민 그리고 불안의식으로 인한 남녀이민경향 때문에 초래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제하에서 출생과 사망간의 차이인 인구의 자연증가보다 특히 사회적 이동이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1925년부터 1930년까지의 인구의 자연증가가 1,509,395명이고 사회적 이동에 의한 증가(來往超過)는 25,965명이다. 그러나 1930년부터 1935년까지의 자연증가는 오히려 감소하여 1,103,052명(73%)인 데 반하여, 사회적 증가는 그 28배인 737,681명(2,814%)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⁹⁾ 이것은 한국에의 일본인 이민의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인을 만주 또는 일본으로 이주 또는 강제동원한 인구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來往超過의 사회적 증가는 일제가 한국지배를 위하여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일본인 침병을 한국에 많이 증파했던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대한 이민정책으로서 한국인을 만주지방으로 보내는 소위 「鮮滿化 政策」 대신 일본인을 한국땅에 이주시켜서 영토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소위 「內鮮化 政策」이 일제의 대한식민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내지연장주의」 또는 「동화정책」에 내포된 기만책이었다.

또한 해외로 이주한 인구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발표에 의하면¹⁰⁾

<표 4> 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증가

내 용 기 간	인구실증가	출생	사망	인구자연증가	來往超過
1925~30	1,535,360	3,576,569	2,067,174	1,509,395	25,965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30~35	1,840,733	3,207,656	2,014,604	1,103,052	737,681
(%)	(119.89)	(89.69)	(101.81)	(73.08)	(2,841.06)

자료: 「朝鮮國勢調查報告」(1935년).

9)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查報告」(朝鮮編), 昭和 10년, p.11.

1936년 이후 1944년 5월까지 일본으로 613,243명, 만주로 320,878명, 중국으로 79,518명, 합계 1,013,639명이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의 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日政末期에 올수록 더욱 심한 경향인바, 이것은 한국인의 만주 쫓는 일본에의 이주가 증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증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변동현상은 일제의 식민정책의 한 단면으로서 한국인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소위 「鮮滿化 政策」 또는 일본인을 한국에 이주시켜서 영토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소위 「內鮮化 政策」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¹¹⁾ 일제가 한국지배를 위하여 정치, 행정,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일본인 첩병을 한국에 증파한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제의 대한이민정책으로서 소위 「鮮滿化 政策」 또는 「內鮮化 政策」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인을 만주지방으로 보내고 그 대신 일본인을 한국 땅에 채우려고 한 것이 일제의 대한식민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소위 「내지연장주의」 또는 「동화정책」에 내포된 한 기만적 술책이었다. 다음 <표 5>에서 보다시피 일본인의 우리나라에의 이주인구는 특히 「병합」 이래로 급격히 증대하여 왔다.

일제의 이민정책은 「병합」 후에는 주로 정치적·군사적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 세력을 도시에 배치시키고 농촌지역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농업이민 위원을 배치시켰다. 또 인구가 희박한 북한지역에 이민계획을 세워 인구의 지역적 조절을 기하기도 하였다. 총체적으로 일본인 이민은 1928년까지 17회에 걸쳐 약 4,000호, 20,000명을 주로 농사가 비옥한 남한지역에 집단이주시키고 그 대신 한국인은 만주, 특히 간도 등지에 이주하게 되었다.¹²⁾

<표 5> 일본인 이민의 증가

연도	1876	1894	1904	1905	1910	1919	1925	1940
인구수	54	9,354	31,093	42,460	171,543	346,619	443,402	707,337
비고	병자조약	청일전쟁	러일전쟁	울사농약	한일병합	3.1운동	보선법· 치안유지법	2차 대전

자료: 金泳謨, 前掲論文, p.517.

10) 近藤劔一 編,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 朝鮮近代史料(2), p.205 참조.

11) 金泳謨, 前掲論文, p.500.

12) 제 1 회 이민(1910년 3월) 160호, 629명, 제 2 회 이민(1912년 3월) 441호,

일본인 이민은 대부분 비농업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식민지 지배민족으로서 관공리 및 전문업, 상업, 광공업, 농업, 잡업 등에 대부분 종사하였다. 한말 이래로 「강패」, 무단도항자, 무뢰한 등 불량배와 같은 저질의 일본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¹³⁾ 그들의 문화이식과 불량행위로 우리의 미풍양속을 많이 손상시켰다. 이들은 적수공권으로 입국하여 식민지 지배민족으로서 후에 점차 비대하여 상층 지배층을 형성한 것이다.

한국인 人口를 직업별로 보면, 식민통치 전 시기를 통하여 農·牧·林·漁, 즉 원시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압도적 다수이었다. 즉 1912년에 82.9%이고 1937년에 78.1%이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전후부터 근대적 산업이 발흥한 결과 상대적으로 공업, 광업, 상업 및 교통업 등의 인구비중이 증대하고 무직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1938년의 직업별 구성비는 농업 75.7%, 상업 6.5%, 公務自由業 3%, 공업 2.7%, 광업 1.2%, 수산업 1.1%, 교통업 1.0%, 기타 有業者 7.0%, 무직자 1.8%이었고 1941년에는 농업 71.3%, 상업 6.9%, 공업 3.9%, 공무자유업 3.5%, 광업 2.0%, 수산업 1.7%, 교통업 2.2%, 기타 유업자 7.8%, 무직자 1.7%이었다.

이로써 原始産業이 한국인 대다수의 생활을 지탱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천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Ⅲ. 都市化 過程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도시화 경향은 농업적 성격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생겨났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일본인의 集注地域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거점확보의 결과였던 것이며 권력·부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일본인이 80%를 점하고 있다는 사회계층적 양상의 결과였던 것이다. 따라서 1930~4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 발전은 식민지 한국에 대한 가혹한 수탈 위에서 빈궁으로 인한 離村向都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직업의 상승이동에 기인한 것이

2,010명을 이주시키고 제 3 회 이민에 1,200호를 모집하였다(金泳謨, 前掲論文, p.518).

13) 韓祐勳, “개국 후 일본인의 한국침투,” 「東西文化」 第1輯, pp.15-17.

14) 大藏省 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第10分冊, pp.72-77.

아니었다. 이와 같은 도시화는 농촌의 황폐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농촌과잉인구의 해외이민과 도시유출이 증대되어 도시노동계층의 성장과 분화를 가져왔으나 전시체제하의 기아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한국인 노동자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1910년에는 한국의 인구는 1,331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겨우 11개도시가 인구 1만4천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총계가 불과 56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적은 수였다.¹⁵⁾ 그러나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1만4천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고장을 말하고 있으니 오늘의 도시기준(인구 5만 이상)은 고사하고 읍기준(인구 2만 이상)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도시인구는 다음 <표 6>에서 보드시피 해마다 증가하여 1920년의 도시인구는 전체인구의 3.4%이던 것이 1925년에는 4.4%, 1930년에는 5.6%, 1935년에는 7.0%, 1940년에는 14.0% 그리고 1942년에는 14.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1920년에는 전체인구의 96.6%이던 것이 1925년에는 95.6%, 1930년에는 94.4%, 1935년에는 93.0%, 1940년에는 86.0% 그리고 1942년에는 85.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일 양국간의 인구의 도시집중을 비교하면 다음 <표 7>에서 보드시피 1920년에 일본의 도시화율은 한국에 비하여 그 비율이 5배가 넘는다. 이것은 일본의 자본주의화가 우리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고 따라서 식민지의 경제수탈능력에서 매우 발전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도시인구가 1920년의 3.4%에서 1930년까지 10년간에 2.2%가 증가한 데 비하여 일본은 18.0%에서 6%가 증가되었고 1930년에서 1940년까지의 10년간의 증가가 한국이 8.4%이고 일본이 13.7%

<표 6> 인구의 도시화

연도 지역	1920	1925	1930	1935	1940	1942
도시	3.4	4.4	5.6	7.0	14.0	14.4
농촌	96.6	95.6	94.4	93.0	86.0	85.6
(실수)	(17,289,983)	(19,522,945)	(21,058,305)	(22,899,038)	(24,326,327)	(26,361,401)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920년), 朝鮮國勢調査報告(1935년),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942년).

15) A. J. Grajdanzev, *Modern Korea*,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1944, p.80.

〈표 7〉 한일 양국의 도시인구율

연도	1920	1930	1940
한국	3.4	5.6	14.0
일본	18.0	24.0	37.7

자료: 金泳謨, 前掲論文, p.510.

인 것을 보아 일본의 급속한 도시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930년에서 1940년간의 급속한 도시성장은 식민지 한국에 대한 가혹한 수탈위에 이루어진 일본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그것이 일본인의 집주지역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거점이라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1938년에는 1만5천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50이나 되었고 그 인구의 총계는 3,012,400명으로 총인구의 약 13~14%였는데 일본인의 71%가 50개 도시에 집중해 있었으며 일본인의 반 이상이 10개 도시, 즉 서울(전 일본인의 21%)·부산(8%)·평양·대구·합흥·인천·청진·원산·대전 및 군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한국인으로서 50개의 도시에 거주한 사람은 한국인 전체인구의 11.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근대적인 생활권 안에 들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 일본인은 모든 도시에서 인구의 한 소수지배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⁶⁾ 또한 1940년 10월의 國勢調査에 의하면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5만 이상인 도시의 수가 불과 14개밖에 되지 않았으며 10만이 넘는 도시는 6개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역시 서울로서 93만5천명으로 근 100만에 가까웠다.

서울의 인구집중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만큼 당연하였고 평양도 서북지방의 요충지이었다. 그러나 부산·청진·인천·원산·진남포·목포·신의주 등은 일제의 한국식민지 정책과 1930년대의 개발전략에 의한 대륙전진병참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발전하게 된 신흥도시들이며 조선왕조시대의 전통적인 도시로서 일제의 식민정책에 부합하는 값어치를 가지지 못하는 도시는 별로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예컨대 일본총독부가 처음 1913년 府制 실시로 지

16) A. J. Grajdanzev, *Modern Korea*, p.80.

〈표 8〉 한국도시의 인구(1940년)

서울	935,464	함흥	75,320	전주	47,230
평양	285,965	개성	72,062	대전	45,541
부산	249,734	진남포	68,656	진주	43,291
청진	197,918	광주	64,520	군산	40,553
대구	178,923	목포	64,256	나진	38,319
인천	171,165	해주	62,651	마산	36,429
원산	79,320	신의주	61,143		

자료: 「朝日年鑑」(1942), p.562.

정된 12개지역, 즉 경성(서울),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등이 府로 지정되었는데, 이 12개의 부 가운데 조선조의 전통적인 도시로서 널리 알려진 개성, 전주, 진주, 해주, 함흥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30년에 개성과 함흥이 부로 승격되면서 부의 수가 14개가 되고 1935년 국세조사 때에는 대전, 전주, 광주가 더해져 부의 수가 전부 17개로 늘어났다. 이는 한마디로 일제가 추진한 식민지로서의 도시의 형성과 성장은 처음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기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웅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1920년대까지의 식민 초기에는 일제가 한국을 식량공급지로서 이용하려 하는 중농정책이 기본을 이루었기 때문에 북부지방의 도시가 남부지방보다 별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1930년대 이후는 북부지방에 많은 공장을 세우게 됨에 따라 북부지방에 커다란 도시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인구의 지역별 변동이나 도별 분포는 자연적·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도시성장과 산업변화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한국인의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직업의 상승이동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계층구조상으로 볼 때 빈궁으로 인한 離村向都 및 해외이민의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표 6〉 인구의 도시화 참조) 농촌에 비하여 도시인구가 급속히 팽창하였는데 도시인구의 팽창¹⁷⁾은 경기도(23.8%)와 평남(15.8%) 및 경남(9.5%)이 전국평균 7.0% 이상을 보여 주고 있다. 경기도는 주로 산업·행정·교육의 중심지인 서울(444,098명)의 인구팽창을 의미하고 경남은 부산

17) 金泳謨, 前掲論文, p.511.

(182,503명), 그리고 평남은 평양(182,121명)의 인구증가를 의미한다. 인구 100,000을 넘는 대도시는 비교적 일정 초기에, 그리고 인구 50,000 내외의 도시는 일정중기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일제시대의 도시팽창은 식민정책과 수탈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중심 및 항구도시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항구가 도시(부) 17개 중에 9개나 된다.

그러나 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제시대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은 일본인의 가혹한 농촌정책에 따라 점차 영락하게 된 농촌인구가 유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도시인구가 급속히 증가된 것이라고 한다. 일제시대의 이농향도의 주된 동기는 빈곤 때문이었고 그 수는 해방 이후 빈곤 때문에 이주해 온 사람들보다 많았다고 한다. 즉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이 한국인을 수탈하는 거점으로 도시에 집중 거주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못 살게 된 한국인이 빠져 나가는 도피구의 구실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¹⁸⁾ 그러므로 그 당시의 도시화는 한국이 근대화한 징조로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이 그만큼 수탈당하고 못 살게 되는 징조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시내에는 土幕民戶가 증가하고 서울시내와 도시에는 실업자가 운집하고 있었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도시지역의 빈터에 움막을 치거나 토굴을 파서 사는 토막민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당시 京城府 당국은 1938년의 「경성부 토막민 조사서」를 발행했는데 그것에 의해 1931년부터 1938년까지의 서울시내 토막민 증가상을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¹⁹⁾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토막민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1935년을 고비로 다소 감소되고 있는 것은 당시의 경성부 당국이 사회사업으로서 弘濟町과 敦岩町의 수용 부락에 수용한 700호가 토막민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며, 이들을 함께 계산하면 서울에서만 매년 200호, 700명 내외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⁰⁾ 그리고 이무렵에 서울의 토막민수는 전체 서울 인구수의 약 2% 내지 3%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가 정식으로 실업조사를 실시한 1931년 11월 15일자 조사결과인 「조선총독부 조사월보」가 말한 서울시내 실업자 실태를 보면 상기한 <표 10>

18) 李萬甲, “農村에서 都會地로 — 都市와 農村,” 「新社會 100年」, 韓國現代史 8, 新丘文化社, 1971, p.261.

19)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 「土幕民の生活・衛生」, 東京: 岩波書店, 1942, p.62.

20) 長郷衛二, 「土幕民と其處置に就いて」, p.41.

〈표 9〉 1931~38년 서울시내 토막민호 증가

연 도	토막호수	토막민수	서울 총인구수
1931	1,538호	5,093명	514,755명
1932	—	—	538,123
1933	2,870	12,378	563,636
1934	2,902	14,179	592,278
1935	3,576	17,320	637,697
1936	—	—	677,241
1937	3,248	14,993	706,396
1938	3,316	16,644	—

자료: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 「土幕人の生活・衛生」, p.62.

〈표 10〉 1931년 서울시내 실업률

구 분	민족별	조사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급료생활자	조선인	18,508명	4,323명	23.4%
	일본인	11,045	1,754	15.9
일용노동자	조선인	19,323	4,432	23.0
	일본인	3,721	460	12.4
기타노동자	조선인	16,870	4,474	26.5
	일본인	2,583	569	22.0
민족별조사자수	조선인	54,701	13,229	24.2
	일본인	17,349	2,783	16.0
조사자계		72,050	12,012	22.2

자료: 「朝鮮總督府 調査月報」 5卷 4輯.

과 같다.²¹⁾

1931년 말 현재의 서울인구는 조선인 261,232명, 일본인 100,323명으로 두 민족을 합친 361,555명의 약 20%인 72,05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월수입 2백원 이상의 급료생활자, 고용주, 자영업자, 학생, 기타 무업자, 여자, 외국인 등은 조사에서 제외」했고 이 밖에 실업자 조건으로 비교적 범위를 좁혀 조사한 실업률이 조선인의 경우 평균 24.2%, 일본인은 16%로 나타나서, 특히 조선인의 경우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1) 「조선일보」, 1931년 11월 29일자, 「朝鮮總督府 調査月報」 5卷 4輯, 1934년 4월 호 p.57 참조.

〈표 11〉 1931년 경기도 도시실업률

(단위: 명, %)

도시	민족별	급료생활자			일용노동자			기타노동자		
		유업자	실업자	실업률	유업자	실업자	실업률	유업자	실업자	실업률
서울	조선인	14,185	4,323	23.4	14,864	4,432	23.0	12,423	4,474	26.5
	일본인	9,291	1,754	15.9	3,261	460	12.4	2,014	569	22.0
인천	조선인	1,337	170	11.4	05,211	527	9.2	1,575	232	12.8
	일본인	1,013	46	4.3	80	17	17.5	215	32	13.0
개성	조선인	487	37	7.1	1,066	38	3.4	1,546	1	0.06
	일본인	251	4	1.6	8	—	0	6	6	50.0
영등포	조선인	67	10	13.0	422	24	5.4	278	11	3.8
	일본인	136	3	2.7	12	1	7.7	0	0	0
수원	조선인	137	14	9.3	420	29	6.5	331	49	12.9
	일본인	146	2	1.4	9	1	10.0	1	1	50.0
계	조선인	16,213	4,554	22.1	21,983	5,050	18.7	16,153	4,767	22.8
	일본인	10,837	1,809	14.3	3,370	497	12.4	2,236	608	21.2
총계		27,050	6,363	19.0	25,353	5,529	17.9	18,389	5,375	22.6

그리고 1931년 11월 15일에 실시된 부분별 실업조사의 경기도 내 도시지역, 즉 이른바 3府 2邑의 조사결과는 〈표 11〉과 같다.²²⁾

실업자를 급료생활자로서 실업한 경우, 일용노동자로서 실업한 경우, 지계꾼이나 인력거꾼과 같이 일정한 공사장 등에 고용되지 않은 자유노동자를 말하는 기타노동자로서 실업한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누어 통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조선인 기타노동자의 경우, 서울은 조사자의 26.5%가 실업자로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23%에 가까운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방의 도시나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에 실업자가 집결되어 있었음을 조사결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그리고 도시에서 좋은 직업을 차지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물론 일본인들이었고 일제시대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위의 〈표 1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한국인의 절대다수(총인구의 4분의 3)가 농업

22) 「동아일보」, 1931년 12월 5일자.

23) 姜萬吉, 「日帝時代 貧民生活史研究」, 전계서, p.342.

〈표 12〉 한국인과 在韓日本人의 직업별 통계

	한 국 인				일 본 인			
	1920	1929	1938	19424	1920	1929	1938	1942
농 업	87.1	81.8	75.7	68.1	11.5	8.3	5.3	3.9
어 업	1.1	1.5	1.5	2.0	3.2	2.5	1.4	1.2
광 업			1.2	2.1			2.3	3.1
공 업	1.9	2.2	2.6	6.7	17.8	14.5	16.6	18.7
			6.5	6.8			23.4	18.2
상 업	5.6	6.3			33.7	30.2		
교 통 업			0.9	1.4			5.9	7.2
공무 및 자유업	1.7	2.5	2.9	3.9	29.3	34.2	38.1	39.5
기타유업자	1.7	4.3	7.0	8.9	3.7	6.9	2.9	4.3
무 직 자	0.9	1.4	1.7	2.1	1.4	3.4	4.0	3.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 J. Grajdanzev, *Modern Korea*,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4, p.79; 朝鮮總督府, 「朝鮮事情」, 昭和 19년, p.8.

에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상업이지만 한국인 전체 취업자의 7%도 되지 못한다. 일본인의 주직업은 공무원 및 전문업(39.5%)이고 두 번째가 공업이며(18.7%) 세 번째가 상업이다(18.2%). 1937년에는 공무원이 41.4%이었는데 1938년, 42년에는 전쟁 때문에 약간 내려서 38.1%, 39.5%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29.3%밖에 안되었었다. 그 밖에 일본인의 직업을 중요한 순서대로 적으면 상업, 공업 및 교통업이 된다. 1938년에 겨우 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1920년에는 11.5%였다(일본인 농업인구 4만명). 그리고 1,717,094명의 한국인과 141,063명의 일본인이 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의 가족원을 제외하면 한국인은 약 220,000명, 일본인은 33,000명이 된다.²⁴⁾ 그러나 일본인이 기업주, 기술자, 회계사 및 감독인 등인 데 대해서 한국인은 주로 미숙련노동자이었다.²⁵⁾

이와 같이 권력을 다루거나 재산을 모으는 데 관련된 직업 또는 사회적 威勢가

24) 가족원을 제외한 인원은 저자가 호수로써 추정한 수치이다(朝鮮總督府, 「朝鮮事情」, 昭和 19년, pp.7-8).

25) A. J. Grajdanzev, *Modern Korea*, p.79.

〈표 13〉 공업자본의 비율

(단위: 원)

연 도	공칭자본				불입자본			
	한국인	일본인	합작	계	한국인	일본인	합작	계
1910	18.6	26.4	55.0	100.0	17.2	31.8	54.9	100.0
1918	14.6	75.2	7.6	100.0	12.3	79.6	3.9	100.0
1925	11.5	63.8	7.6	100.0	10.2	70.7	5.8	100.0
1929	6.9	58.6	34.3	100.0	6.4	62.4	30.8	100.0

자료: 洪以燮, “나라 잃고 36年 = 朝鮮總督府,” 「朝鮮現代史」, 4, 新丘文化社, 1969, p.47(〈표 14〉).

높은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계층적인 양상은 일제시대 한국도시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일본인은 자기들이 정착하여 도시생활을 하는 데 편리하도록 도시를 꾸몄다. 그들은 관청, 정거장, 은행, 회사, 학교, 시장, 그 밖에 근대적인 기관 및 시설들을 자기들이 거주하는 데 가깝고 편리한 데 세우도록 하였다.

일제식민정책에 따른 한국농민의 빈곤은 도시의 궁핍과 직결되어 극대화하고 있었다. 한국에 있어서 공업자본의 성장상황의 비율을 나타낸 〈표 13〉을 보면 공업자본의 실권은 일본인이 잡고 있으며 한국인의 불입자본은 1929년의 경우 6.4%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식민지 체제하의 한국민족자본은 급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실태는 다음과 같은 민족별 공장통계 〈표 14〉를 볼 때, 좀더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게 된다.

〈표 14〉에서 공장수는 한국인의 것이 일본인의 것을 능가하고 있으나 자본을 비교하면 90.0%가 일본인의 것임에 비하여 한국인의 그것은 겨우 4.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1934년도 말의 도시생활자의 연수입은 어떠하였는가. 〈표 15〉²⁶⁾의 통계에 의하면 도시생활자의 32.20%가 면세자로서 이들은 무직자, 실업자로서 극빈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200원 미만의 빈곤자가 47.11%를 차지하고 있으니 1935년경의 도시생활자는 절대다수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일제시대 한국의 도시형성의 배경, 도시의 성장, 한일 민족간의 도시

26) 李清源, 「朝鮮讀本」, 東京: 學藝社, 1936, p.11.

〈표 14〉 민족별 공장통계(1929년도)

	공장수	자본금
한국인	2,751(51.5)	2,500만원(4.6)
관공서	72(1.3)	900만원(1.6)
일본인	2,425(45.4)	49,900만원(90.9)
기타 계	5,342(100.0)	54,900만원(100.0)

자료: 洪以燮, 前掲論文, p.47(〈표 15〉).

비고: () 내는 구성비(%)임.

〈표 15〉 도시(금융조합 소재지) 생활자의 연수입(1934년 말 현재)

	3,000원 이상	2,000원 이상	1,000원 이상	400원 이상	200원 이상	100원 이상	100원 이하	면세자	계
도시 총 가구수	13,517	15,757	38,675	84,706	58,046	37,043	22,373	128,266	398,383
%	3.39	3.96	9.71	21.26	14.57	9.30	5.61	32.20	100.00

비고: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平南支部調査(단 1934년 말 현재).

집중, 지역분포 및 직업분포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가 어떻게 일제의 식민정책과 연관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대강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도시화는 본질적으로 대부분이 한국사회의 자생적 발전이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식민지 경영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전혀 도시적인 성격이 없던 지역에 일제의 식민지 배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일본인 거주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일제시대 전반적인 도시화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인구가입과 지역 조정(새로운 도시의 형성과 지역편입을 포괄)이었다. 이 가운데 인구가입은 거의가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의해 설명되고, 지역조정은 주로 산업정책과 연관된다. 특히 1930년 이후 지역조정은 많은 경우 일제의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서의 제한적인 공업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1930년 이전의 지역조정은 전통적인 도시들의 府로의 승격이 주를 이루고 공업화와는 별로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일제시대 식민도시화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도시화에 있어서 이중적인 단절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단절은 전통적인 도시화로부터의 단절이고, 두 번째 단절은 일제의 패망에 따른 단절이었다. 일제의 패망은 도시에 있어 일본인의 지배에 종말을 가져왔고 식민도시의 이중적인 구조

도 자연히 소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분단은 전국적인 도시체계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이리하여 일제시대의 식민도시화는 광복 후의 한국의 도시화와 비교할 때 단절적인 성격을 보이지만 그것이 광복 후의 도시화의 중요한 배경요인을 이루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오늘의 도시화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Ⅳ. 勞動階層의 成長과 分化

이와 같은 도시화생활의 궁핍화를 가져온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기의 경제공황이 한국농촌의 황폐화를 촉진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의 과잉인구의 도시유출이 증대된 사실과 아울러 1930년대 이후의 전시체제하에서 군수공업화에 따르는 한국노동자의 양적 증대와 그 가혹한 착취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이 시기의 한국노동계층의 분화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대에 들어와 식민지 한국의 광공업이 크게 발전하자 노동자계층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공장노동자는 1930년의 101,043명으로부터 1936년에는 188,250명, 1942년에는 520,439명으로 늘었으며, 광산노동자는 1930년의 31,100명으로부터 1936년에 139,934명, 1942년에 233,996명으로 늘어난 놀라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광공업노동자 이외에도 토건, 운수 기타 각종 자유노동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1936년경 한국의 산업노동자 총수는 100만을 훨씬 초과 150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는 전문가도 있다.²⁷⁾

그리고 1939년 이후에는 「국민징용령」의 적용에 의한 노동자의 강제동원이 시작되어 일본 기타 지역에서의 대량연행을 포함해서 한국 내 군수공장, 광산 기타에 모집, 관알선, 근로보국단 또는 학도근로동원 등의 형식으로 대규모로 징용되어 강제동원되었다. 이리하여 1939년 이래 한국에서 동원되어 일본본토, 남양군도 등지로 송출된 노동자의 총수는 1944년 6월 현재 444,306명이었는데 1944년의 송출계획이 40만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945년 8월까지의 100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²⁸⁾ 이와는 별도로 1939년 이래 1944년 8월까지에 75,636명의 노동자

27) 金潤煥, “韓國勞動運動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現代文化史大系」Ⅳ, p.241. 별개의 통계로는 공업노동자는 1933년 99,430명으로부터 1936년에는 148,799명, 1940년에는 230,688명으로 늘었으며 광산노동자는 1933년의 70,711명으로부터 1936년에는 152,723명, 1938년에는 223,790명으로 늘었다(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朝鮮支配」下, p.161).

가 균요원으로 국내, 일본, 중국, 남양 등지에 송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²⁹⁾

1945년부터는 민족징용령을 비롯하여 노무동원관계법들을 통합해서 종합적인 노무동원체계를 정비·강화하였으며 전시노동력 동원수는 1939~45년간에 「관알선」 동원수 약 40만명, 징용노동수 약 30만명, 이 밖에 각 도별 동원수가 약 400여만명으로 합계 480만명에 달하고 있다.³⁰⁾ 이와 같은 노무동원에 대해서 한국인의 집단적 「기피행위」가 증대하였기 때문에 피징용자를 훈련소에 입소시켜 1개월간 각종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각 경찰서는 「시국인식」, 「순국정신」에 호소하면서 취체를 강화하였다.

한국노동자는 그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표 16>에서 보듯이 공업노동자의 비율이 전 노동자의 28%를 점하도록 증대하였을 뿐더러 1920년대에 50% 이상을 점하였던 방직·식품공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비율이 1930년대에 점감하고 1940년대부터는 중공업부문의 노동자 비율이 40~50%로 증대하고 있다.

한편 한 통계에 의하면 1930년대 중기 이후에는 대규모 공장의 노동자가 증가하여 1939년에는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공장노동자수가 전체의 51.6%, 2

<표 16> 한국인 노동자수(1944, 45년 현재)

산업별	인원수	%	조사년월
공장노동자	591,494	27.9	(1945년 1월)
토건노동자	437,752	20.6	(1944년 10월)
운수노동자(육상)	179,544	8.5	(1944년 10월)
임업노동자	205,911	9.7	(1944년 10월)
수산노동자	211,520	10.0	(1944년 10월)
광산노동자	273,863	12.9	(1944년 9월)
탄광노동자	72,561	3.4	(1944년 9월)
농업노동자	130,377	6.1	(1943년 말)
해상운수노동자	19,352	0.9	(1943년 말)
합 계	2,122,374	100.0	

자료: 朝鮮産業勞動調査所, 「産業勞動時報」 1-2, 1946년.

28) 金潤煥, 전게서, p.242; 近藤劔一 編,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 朝鮮近代史料(2), 1961, pp.153-55.

29) 近藤劔一 編, 상게서, p.156.

30) 朴慶植, 전게서, p.160.

백명 이상이 있는 공장노동자수가 39.3%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양상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력과 조직성을 강화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노동자는 민족적 차별에 의한 기아임금, 주야의 장시간노동, 식사·주거의 열악, 이 밖에 불리한 노동조건 등으로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많은 희생이 강요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투쟁의 발생이 빈번하게 되었다. 1912년에는 노동투쟁발생이 6건에 참가인원수는 1,573명이었는데 비하여 1924년에는 45건 발생에 참가인원수가 6,150명으로 격증하고 있다. 이같은 노동투쟁은 1931년의 경우 격증해서 210건 발생에 17,114명이 그리고 1938년에는 90건에 6,929명이 쟁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같이 계속되는 투쟁의 주요원인은 임금문제이었다. 즉 1934년의 경우 투쟁발생이 199건인데 그 중 임금문제에 의한 것이 156건에 달하고 있으며 1935년에는 170건 발생에 132건이 임금관계투쟁이었다.

그러면 당시 도시의 임금은 어느 정도인가. 총독부에서 조사한 민족별 임금은 <표 17>과 같다.³¹⁾

이처럼 한국인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도 되지 못하였으며 한국인 성인의 임금이 일본인 성인여자의 임금보다도 못할 정도였다. 한편 전시의 비상시국을 병자하여 턱없이 많은 노동시간을 강요하였다. 광산노동자들이 평균 11시간, 공장노동자들이 평균 12시간을 초과하였으며 노동력 부족이 야기하는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1939년 4월부터 임금통제령을 시행하여 최고임금액을 한정하고 그 결과 노

<표 17> 민족별 임금비교

	한 국 인				일 본 인			
	성년공		유년공		성년공		유년공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1933	0.92	0.50	0.46	0.28	1.94	0.96	0.77	0.53
1934	0.92	0.51	0.36	0.31	1.83	0.88	0.83	0.67
1935	0.90	0.49	0.49	0.30	1.83	1.06	0.81	0.43
1937	0.95	0.48	0.42	0.32	1.88	0.98	0.85	0.78

자료: 총독부 조사, 50인 이상 직공사용공장 1일 평균임금.

姬野實 編, 「朝鮮經濟圖表」.

31)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朝鮮支配」 下, 青木書店, 1973, p.164.

동자의 실질임금은 1936년 수준보다 점차 하향하는 경향을 보여 실질임금지수가 1936년을 100으로 할 때 1940년에는 86에 불과하였다.³²⁾ 이와 같이 일본의 거대한 독점자본은 식민지 인민의 노동력을 보다 값싸게 흡수했던 것이다. 한국인의 이러한 민족적 궁핍은 일본독점자본의 수탈에 기인한 것으로 齋藤 총독 등이 내세운 「문화정치」의 기만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V. 韓國經濟의 變動面

일제하 식민지 한국의 경제변동을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통설에 따르면 제 1기는 1910~19년, 제 2기는 1920~30년 그리고 제 3기는 1931~45년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제 1기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수탈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과 통신 등 기초적인 설비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原始産業을 육성하는데 중점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朝鮮會社令」이 1910년에 제정·공포되어 1920년에 폐지되는 관계로 동 法令이 존재함으로써 일본자본의 유입이 제한되고 한국 내에 있어서의 회사설립이 억제되어 한국의 공업발전이 제약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일제의 前期的 商業資本에 의한 민족경제의 수탈과 식민지 지배체제의 연속적 기초공작을 전개한 시기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민족자본의 맹아가 일제의 침략으로 짓밟히면서 근대적 工業生成의 畸型性이 노정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미 구한국정부는 1902년에 平試院을 설치하여 근대적인 度量衡 制度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어서 1906년에는 「토지가옥 증명규칙 및 동 시행세칙」의 법령을 발표하여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법률적으로 확인케 하였으며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 및 「부동산증명령」을 발표하여 토지사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토록하였다.³³⁾ 이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과 토지제도의 재편성은 이 시기의 주요 식민지 정책으로써 그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였다.

제 2기에는 한국식민지 산업정책의 중점을 소위 産米增殖計劃에 집중시키고 이

32) 金潤煥, 前掲論文, pp.243-44.

33) 崔虎鎮, 「近代韓國經濟史」, 서울: 博英社, 1973, pp.218-19.

른바 米穀單種耕作型 産業構造로 농촌사회의 일대 재편성을 강행시켰으며 이로써 전통적인 한국경제를 해체시키고 일본경제에의 연속성을 강화시켰으며 일본에로의移出을 목적으로 하는 米穀中心의 산업구조로 재편성하였다. 아울러 일본기업 자본의 한국진출에 장애가 되었던 「會社令」을 철폐하고 한국을 일본관세장벽 내에 들어 있게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일본경제에의 종속화를 더욱 촉진케 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이 총독부 官의 지도로 수행되고 토지개량사업 특히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1910년 당시 水田 전체면적의 약 8할이 水利不安全한 天水畝이었던 것이 1940년 말에는 水利安全畝이 50%, 수리불완전하지만 관개시설답이 21%, 天水畝이 29%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개간, 간척 등으로 경지면적이 증대하고 농업기술의 개량보급으로 수확고의 증대를 보았으나 이러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한 朝鮮米의 증산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일본에 의해 수탈당하였기 때문에 한국민에게는 전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제의 산업정책의 중점사업으로 1926년 1월에 朝鮮水電株式會社가 설립되었고, 1927년 6월에는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1930년 1월에는 조선비료주식회사의 흥남공장이 조업을 개시하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조선의 농촌 잉여노동력은 근대화된 공업부문에서 흡수케 됨으로써 공장의 임금노동자 생성의 초기적 현상이 출현되었으며 앞으로의 농촌 사회변동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제 3기의 특징은 1931년 만주사변 발발에서부터 태평양전쟁의 말기인 1945년까지의 약 15년간의 시기로서 이 기간은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본격적인 자본수출 그리고 군수산업체제를 주축으로 한 파행적인 식민지 조선공업의 도출과 그리고 전쟁말기의 경제수탈 및 인적자원의 강제동원이 자행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세계 대불황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산미증산계획」을 중단하고 따라서 米穀單種耕作型 産業構造의 붕괴에 직면하자 이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제정책을 농업중심 정책으로부터 공업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은 만주침략과 중국침략을 위하여 식민지 조선을 「대륙전진 병참기지」로 설정하고 침략전쟁수행을 위하여 군사공업건설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였다. 일본은 이땅을 병참기지화함으로써 한국에서 풍부한 철, 석탄, 면화 등의 공업원료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제조, 가공할 수 있었고, 특히 조선농촌에 과잉인구가 매년 격증하는 데 비추어 이들 과잉노동력을 가장 저임금으로 그들의 공업 노동력에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31년 이래 한국에 「유사 근대적」인 공업으

로 방직, 시멘트, 광산용 기기, 전구, 鐵器, 비누, 비료공장 등이 다양하게 설립되었으며 1931~36년간에 건설된 공장의 수로는 「한일병합」 이후부터 1931년까지의 그것의 2배나 되고, 생산액에 있어서도 그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방직, 화학, 식료품 등의 3가지 공업은 전체생산액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반면에 기계, 가구, 공업의 생산액은 겨우 1%에 불과한 불균형적인 생산구조현상이 노정되었던 것이다.³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업화 건설은 조선의 경제를 하나의 독립된 사회경제적 단위에서 격리시키고, 완전히 일본의 경제에 예속화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일제의 식민화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그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충 심화시켜간 것이다.

Ⅵ. 結 語

日帝植民統治下の 初期 社會階層分化에 큰 영향을 미친 土地調査事業으로 土地所有制가 제도화되고 화폐경제의 농촌침투 등으로 농민의 계층 分解 및 分化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일제하에 한국농민의 계층구성의 변천은 총독부 말기로 다가 오면서 自作農의 점진적 감소에 비해 小作의 격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小作농이 급증하고 있어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따르는 한 민족의 궁핍화를 실증 하고 있다. 한편 大地主층으로 토지의 집중을 가져오고 일본은 소작제도에 기생하는 매판적 한국인 지주세력을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제는 또 한국농업의 식민지적 미곡단종경작구조로서 재편성을 일층강화하여 産業開發 이란 미명하에 移植資本主義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山林政策 產綿花, 증산정책 양잠업정책 등도 日本人 地主의 증대와 한국농민의 하강계층화 및 빈궁화를 가속화 하였다.

농지를 상실한 한국농민은 농촌에 남아 있지 못하고 離農向都 및 해외로 이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는 도시로 나가 유민이 되거나 광산공업지대의 임금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국내, 일본, 만주, 중국, 남방 등지의 전선에 군무요원으로 강제 동원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농민은 일제하에서 가혹한 수탈과 학대를 당하여 더욱더 몰락하는 추세에 있다가 8·15 해방을 맞은 것이었다.

34) 金聖壽, “植民地 工業發達과 그 特性,” 「日帝下 韓國經濟史論」, 經進社, 1993, pp.42-47.

다음 日帝下의 人口變動은 表面上으로도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社會 各分野의 식민지배 엘리트로서 日本人의 韓國移住가 植民支配가 深化될수록 증대확대추세에 있었고 日帝의 韓國人 海外 이민정책으로 소위 「鮮滿化 政策」 또는 「內鮮化 政策」에 의하여 韓國人의 해외 이동이 활발하게 강요되었다.

日帝下의 韓國 都市化 過程은 日本人의 集住地域으로서 日本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거점 확보의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30~4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 성장은 식민지 한국에 대한 가혹한 수탈 위에서 빈궁으로 인한 離村向都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 할수 있다.

日帝時代의 한국에서의 도시 팽창은 식민정책과 수탈을 원활히 수행 할수 있는 행정중심 및 항구도시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항구가 도시(府) 17개 주에 9개나 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와같이 일제시대의 급격한 도시화 경행의 주된 동기는 농촌분해와 농촌주민의 빈곤 때문이었으며 일본인이 한국인을 수탈하는 거점으로 도시에 집중 거주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못살게 된 한국인이 빠져나가는 도피구의 구실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도시화 현상을 한국이 근대화한 징조로서 볼수는 없는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시내는 土幕民戶가 증가하고 서울시내와 도시에는 실업자가 운집하고 있었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도시지역의 빈터에 움막을 치거나 토굴을 파서 사는 토막민의수가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식민시대에 권력을 다루거나 축재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회적 위신이 높은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이며 이들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이와같은 민족별 차별적 사회계층적인 양상은 한국도시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日本人은 자기들이 정착하여 도시생활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시를 꾸몄으며 그들은 관청, 정거장, 은행, 회사, 학교, 시장 그밖에 근대적 기관 및 시설을 자기들이 거주하는데 가깝고 편리한 데 세우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일제시대의 식민 도시화는 역사적으로 후세에 二重의 단절을 가져오게 한것이다. 첫째의 단절은 조선조 이래의 전통적인 도시화로 부터의 단절이고 두번째 단절은 일제의 패망에 따른 단절이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단절구조에다 다시 광복후의 남북한의 분단은 큰제약요건이자 중요한 배경요인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다음 노동계층의 신장과 분화를 살펴보면 1920년대말과 1930년대초기의 세계적 경제공황은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더러 한국농촌의 황폐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과잉 인구를 大量으로 도시에 유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

의 戰時體制下에서 군수공업화에 따르는 한국노동자의 양적증대와 그 가혹한 수탈정책은 한국인노동계층의 도시화생활의 궁핍화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한국노동자는 그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업노동자의 비율이 1940年代中半期에 전노동자의 28%를 점화도록 증대 하였을 뿐더러 1920년대에 50% 이상을 점하였던 방직·식료품공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비율이 1930년대에 점감하고 1940년대부터 중공업부문의 노동자 비율이 40~50%로 증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노동자는 민족적차별에 의한 기아임금, 주야의 장시간 노동, 식사 주거의 열악, 이밖에 불리한 노동조건 등으로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많은 희생이 강요되었다. 한국인의 이러한 민족적 궁핍은 일제의 침탈정책과 일본독점자본의 침탈에 기인한 것으로 齋藤총독 등이 내세운 소위 「文化政治」의 기만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다음 日帝植民支配下에서의 韓國經濟의 變動面을 개관하면 일제하의 식민지 한국의 경제변동은 크게 3기로 구분된다. 즉 제 1기 1910~19년, 제 2기 1920~30년 그리고 제 3기 1931~45년으로 구분할수 있겠다. 제 1기는 일제의 식민지배의 제도화와 식민지 수탈정책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와 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통신의 기초설비와 그리고 식량과 원료등 原始産業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시기에 「朝鮮會社令」公布와 日本의 前期的商業資本에 의한 민족경제의 수탈이 자행되고 이밖에 식민지 지배체제를 위한 예측적 제반 기초공작이 이루어졌다.

제 2기에는 產米增殖計劃에 식민지산업 정책의 중점을 두고 米穀單種耕作型 産業構造로 농촌사회를 재편성하였다. 日本에로의 移出을 목적으로 하는 米穀中心의 産業구조 재편성과 會社令을 철폐하고 한국을 일본관세 장벽내에 들어있게 함으로써 일본자본의 침투를 가속화시켜 韓國經濟의 예측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제 3기에는 일제의 대륙침략 전쟁의 확대와 일본 독점자본의 일반적 위기가 심화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일본의 자본수출과 군수산업중심의 파행적식민지 공업체제가 형성된 시기이며 아울러 전쟁말기의 경제수탈과 강제동원이 강행된 단계라고 할수 있다. 이로 인하여 1931년 이래 한국에 왜곡된 식민지 근대화로 방직, 세멘트, 광산용 기기, 전구, 鐵器, 비누 비료공장 등이 대양하게 설립 되었으며 1931~36년간에 건설된 공장의 수로는 「한일병합」 이후부터 1931년까지의 그것의 2배나되고 생산액에 있어서도 그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방직, 화학, 실료품 등의 3가지 공업은 전체생산액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반면에 기계, 가구, 공업의 생산액의 경우 1%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생산

구조현상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의 경제를 그자체가 일본의 하나의 독립된 사회경제적 구성단위에서 분리격리시켜 완전히 일본의 경제에 예속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일제의 식민화정책은 한민족을 강제 동화시키고 한국국토를 군사적으로 점령침탈하여 정치적 지배체제를 구축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그 사회경제적 예속화기반을 확충 심화 시켜 가는데 광분하였던 것이다.